

**Press coverage of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May 13, 2019, Prof. Michael Barr**

- 8 newspapers attended. As of May 16, 9 have written reports about it.
- Dailies(2) – Munhwa Ilbo, JoongAng Daily
- Monthlies(1) – Rich Magazine
- Economic Dailies(3) – Digital Times, Asia Times, Viva 100
- News Agencies(2) – NewsHankuk, Korea Times
- Broadcast(1) – E Daily TV

2019년 5월 13일 Michael Barr  
조찬강연회 관련 언론보도 개요

□ 총 8개 언론사 참석: 5월 16일 현재 기사 (9건)

- 일간지(2) - 문화일보, 중앙일보
- 월간지(1) - 월간리치
- 경제지(3) - 디지털타임스, 아시아타임즈, 브릿지경제
- 인터넷신문(2) - 뉴스한국, 코리아타임즈
- 방송(1) - 이데일리 TV

## 문화일보 경제

기사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3일

# “혁신이란 이름으로 리스크 간과 땀 금융시장 붕괴”

황혜진기자 [best@munhwa.com](mailto:best@munhwa.com)

美 마이클 바 교수 조찬 강연  
유연한 규제로 혁신혜택 얻길

“금융혁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규제로 혁신의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면서 혁신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클 바(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사진)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쟁적인 금융혁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근간을 마련한 바 교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며 금융시장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바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기술을 근간으로 한 전 세계적인 금융혁신에 대해 “잘못된 이해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혁신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변화지만 문제점도 동반한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혁신에 대한 이해의 예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고빈도매매(HFT)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좋지만, 혁신이란 이름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리스크까지 간과하면 또다시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회복력과 복원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 교수는 이와 함께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상실증 △유동성과 레버리지 규제 △자산 거품 △글로벌 리스크 등을 금융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제시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mailto:best@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디지털타임스** 뉴스인쇄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5130210995882000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51302109958820003)**마이클 바 "금융혁신, 활성화하는 동시에 리스크도 관리해야"**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 입력: 2019-05-13 15:55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 연사 초청...금융 시스템 성패 좌우할 5가지 요인 제시

**"혁신 도모하면서도 충격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 확보해야"**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유연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활성화하면서도 충분한 감시와 견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된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다.

이날 바 교수는 발전하는 금융산업에 있어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과거 금융위기 에 대한 기억상실증 △유동성과 레버리지 과잉 △자산 거품 △글로벌 리스크 △ 혁신에 대한 과신 등을 꼽았다. 특히 바 교수는 "금융시장에 혁신이 일어나면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금융 혁신의 양면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바 교수는 "금융시장 특정 부분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한 상품이 기존 금융 시스템만큼 정교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고빈도 매매(HFT)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이 IT기술을 접목해 고빈도 매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HFT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상황을 낳았다"고 전했다.

금융 혁신에 대한 맹신은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바 교수는 지적했다. 규제 당국 스스로도 혁신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 교수는 "규제 당국이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장려하는 정책이 전통적인 기술들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 당국이 조심스러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바 교수는 "혁신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과 혁신의 수혜를 고루 받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융 혁신 상황에서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이 중요하다.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을 좀 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연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력시간: 2019-05-13 16:01:26

 아시아타임즈

HOME &gt; 뉴스 &gt; 증권

# 미국 진보 석학의 경고 "금융규제 약해지면 다시 위기온다"

ⓒ 김지호 기자 | Ⓞ 승인 2019.05.13 22:11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리스크 관리와 전세계 자본시장의 모순이 누적돼 일어납니다. 세계 각국이 공조해 국제 금융시장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사진)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조찬 특별강연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됐으나 현재는 약화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Rule)의 근간을 마련한 바 원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미국 진보진영의 '금융규제' 찬성론자다.

이날 강연은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그가 꼽은 5가지 요인은 △금융기관의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상실증 △유동성과 레버리지 과잉 △자산 거품 △글로벌 리스크 △혁신에 대한 과신 등이다.

바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형 은행 외에는 스트레스테스트 낮추고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7000억 달러 기업에는 이런 규제를 아예 완화시켰다"며 "미국 금융산업이 약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금융혁신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여러가지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특정 부분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한 상품이 기존 금융 시스템만큼 정교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 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고빈도 매매(HFT)를 들었다. 그는 "금융이 IT기술을 접목해 고빈도 매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HFT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상황을 낳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바 원장은 규제와 혁신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도드-프랭크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을 좀 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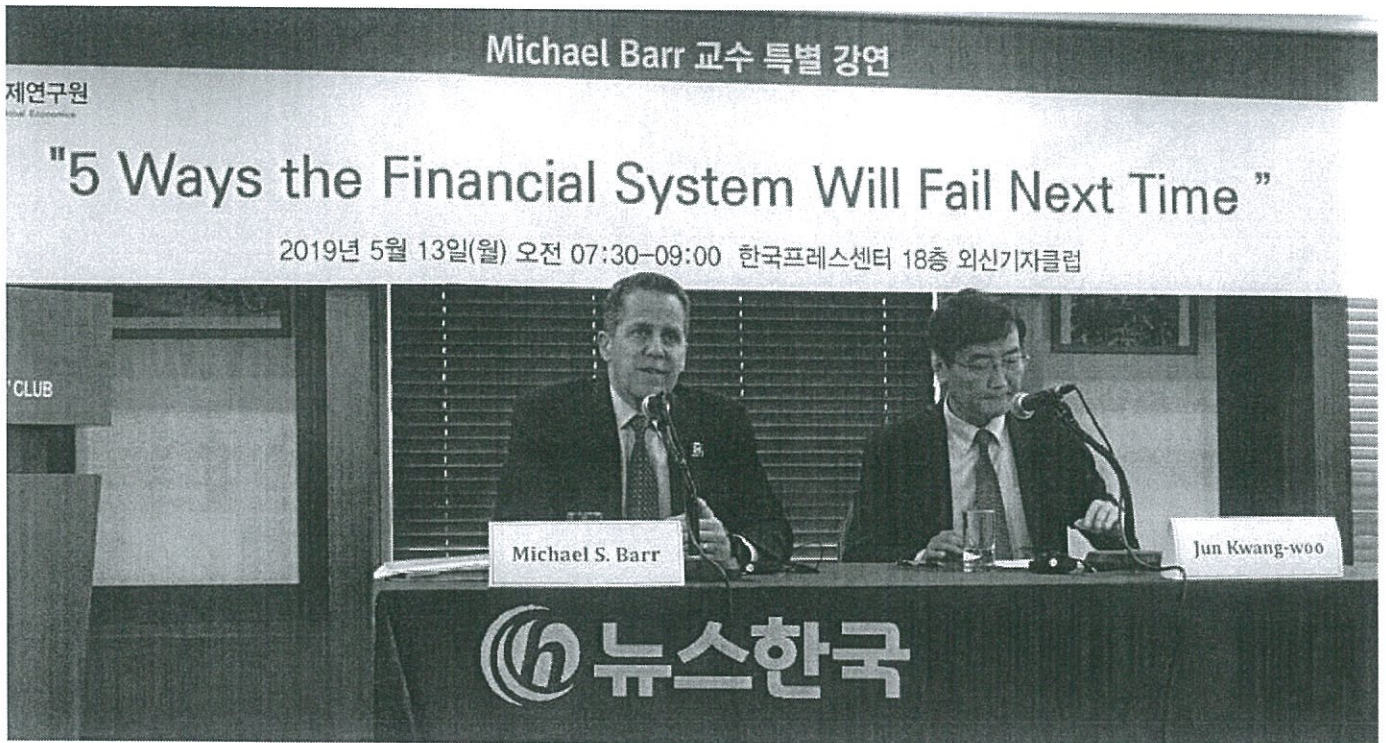


뉴스 > 경제

# 마이클 바, "혁신 방해한다고 금융 감시 소홀? 충분히 견제해야"

등록 2019-05-14 08:39:35 | 수정 2019-05-14 12:28:33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한 후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듣고 답했다. (뉴스한국)

“금융위기는 일회성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불확실성 관리를 무분별하게 하면서 자본시장에 모순 요인이 누적하면 발생한다. 자만이나 무사안일주의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마이클 바 美 미시건대 공공정책대학원장)”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 혁신과 함께 감시와 견제를 강조했다. 바 원장은 금융 체제 불확실성 관리를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법(2010년)이 미 의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한 인물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소 이사장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파산한 후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개혁을 이행하면서 금융 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금융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바 교수의 강연이 시의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바 교수는 '향후 금융 체제 실패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목으로 약 40분 동안 강연했다. 그는 먼저 금융위기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원인이 허술한 감시 기능에 있다고 지적했다. 바 교수는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를 복기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의회 등도 소비자를 위한 감시·보호 기능을 이행하지 못했다. 주택 가격이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이 덩달아 커졌는데 감시가 약해졌다. 가계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았고 신용도가 낮은 기관도 AAA를 받았으며 금융시장에서 기망적인 거래가 나타났다. 금융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모기지 부도율이 늘고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져 금융 체제가 충격을 받았다. 은행과 비은행이 도산하며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 연쇄 붕괴가 마치 전염병처럼 퍼졌다. 부실한 기업 탓에 건전한 기업도 영향을 받았다."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미국은 금융시장이 안정하도록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실행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바 교수는 "세계적인 개혁으로 금융 체제가 안전해졌지만 충분히 안전한지는 의문"이라며, 여전히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원인으로 △과거 금융위기 기억상실 △유동성과 레버리지 규제 △자산 거품 △잘못된 혁신 해석 △세계적 불확실성 5가지를 꼽았다.

바 교수는 "금융 및 규제 기관이나 의회·정부가 금융 위기 교훈을 잊을 수 있고 그러면 체제 전체가 과거의 관행을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금융 위기 기억이 사라지면서 '안전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개혁의 중요도가 정부나 정책 입안자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억상실증을 겪더라도 정부는 호황에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 혁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금융 시장 혁신으로 만든 복잡한 상품 탓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의 욕구를 충족하려 등장한 게 정교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잘못 이해하면서 일반인이 1000분의 1초로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FT)가 가능해졌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 혁신 상황에서 규제는 쉽지 않지만 유연한 규제도 충분히 감시·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 원장은 "금융 개혁 덕분에 안전하고 공정해지긴 했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개혁을 약화하려 공격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며 "또 다른 금융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개혁의 궤도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2019. 5. 14.

마이클 바, "혁신 방해한다고 금융 감시 소홀? 충분히 견제해야"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

취소

인쇄하기

## [이데일리N] 석학의 경고..."금융 혁신과 건전성 규제간 균형 중요한 때"

등록 2019-05-14 오전 10:10:50

수정 2019-05-14 오전 10:10:50

김태완 기자

[이데일리N]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금융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특별강연을 통해 금융 혁신과 건전성 규제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때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바 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다섯가지 요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5가지 요인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망각 △유동성과 레버리지 △자산 거품 △혁신에 대한 오해 △글로벌 경제 리스크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혁신에 대한 오해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해는 또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을 더 개방해 경쟁도는 높이되, 완충 여력도 확보해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 원장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한 도드프랭크법의 발의와 통과(2010년)에 큰 역할을 한 금융 석학이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 브릿지경제

## [비바100] "금융혁신 '맹신'은 곧 위기... 규제·장려 '균형' 중요"

[브릿지 초대석] 마이클 바 美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

정길준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9-05-16 07:00



마이클 바 교수는 금융혁신을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유연한 규제'로 향후 예상되는 금융 리스크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우리는 ‘금융 혁신’에 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여러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해야 하겠지만 부작용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되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리먼 사태나 외환위기 때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려 또 다른 금융위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연구원(원장 전광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바(Michael Barr)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5 Ways the Financial System Will Fail Next Time)’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과 이어진 브릿지경제신문과의 추가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유연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활성화하면서도 ‘충분한 감시와 견제’로

위기 때 우려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 교수는 이와 관련해 향후 금융산업에 있어 주의해야 할 5가지를 강조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가 강조한 첫째 주의사항은 ‘기억상실증’이다. 금융기관들이 과거 리먼 사태나 금융 위기 때의 기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는 질타했다. 자칫 금융위기가 반복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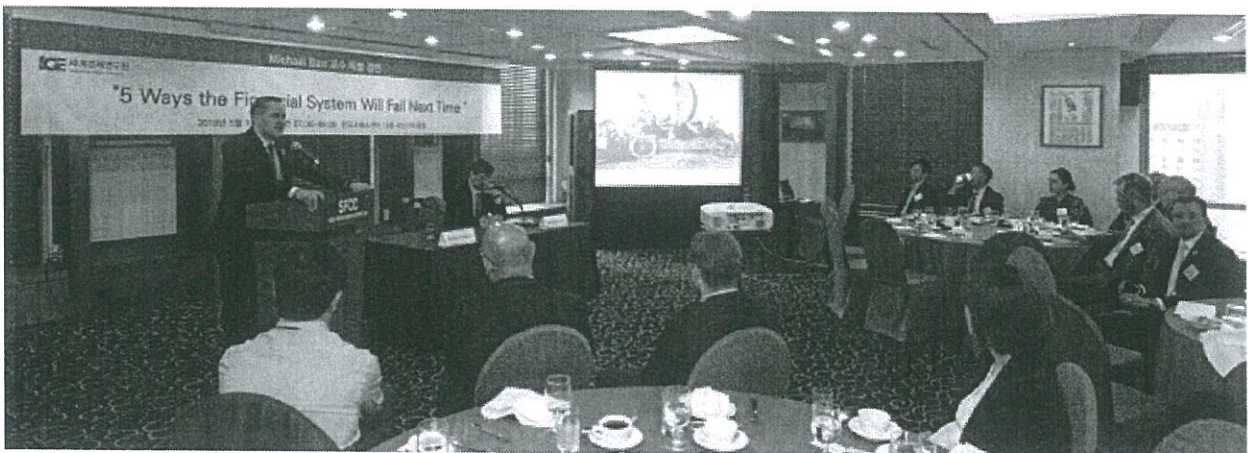
둘째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과잉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다하게 풀리고 부채는 크게 늘었다”며 늘어난 유동성과 부채비율을 ‘리스크 요인’으로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자산 거품이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는 글로벌 리스크다. 그는 “금융시장의 위험요인들이 국경간에 쉽게 파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관리할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과거 리먼 사태 등을 경험했음에도 오늘날 과연 금융부문의 국제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문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글로벌 금융협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바 교수가 가장 길게, 그리고 각별히 강조한 마지막 요인은 ‘혁신에 대한 과신 혹은 오해’다. 금융혁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따라서 ‘유연한 규제’로 혁신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혁신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특별강연에서 마이크 바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결국 혁신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데다, 잘못 되었을 경우 파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보라는 얘기도. 최근 국내에서도 열풍이 일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등 금융혁신 바람에 관해 그는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작용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 철저한 관심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 교수는 특히 “금융시장에 혁신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한다”면서 “이에 따른 거래로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혁신의 양면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 특정 부분의 니즈를 충족하려 등장한 상품이 기존 금융 시스템만큼 정교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그 대표적 예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고빈도 매매(HFT)’를 들었다. 금융과 IT기술의 접목이라는 ‘모양’은 좋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HFT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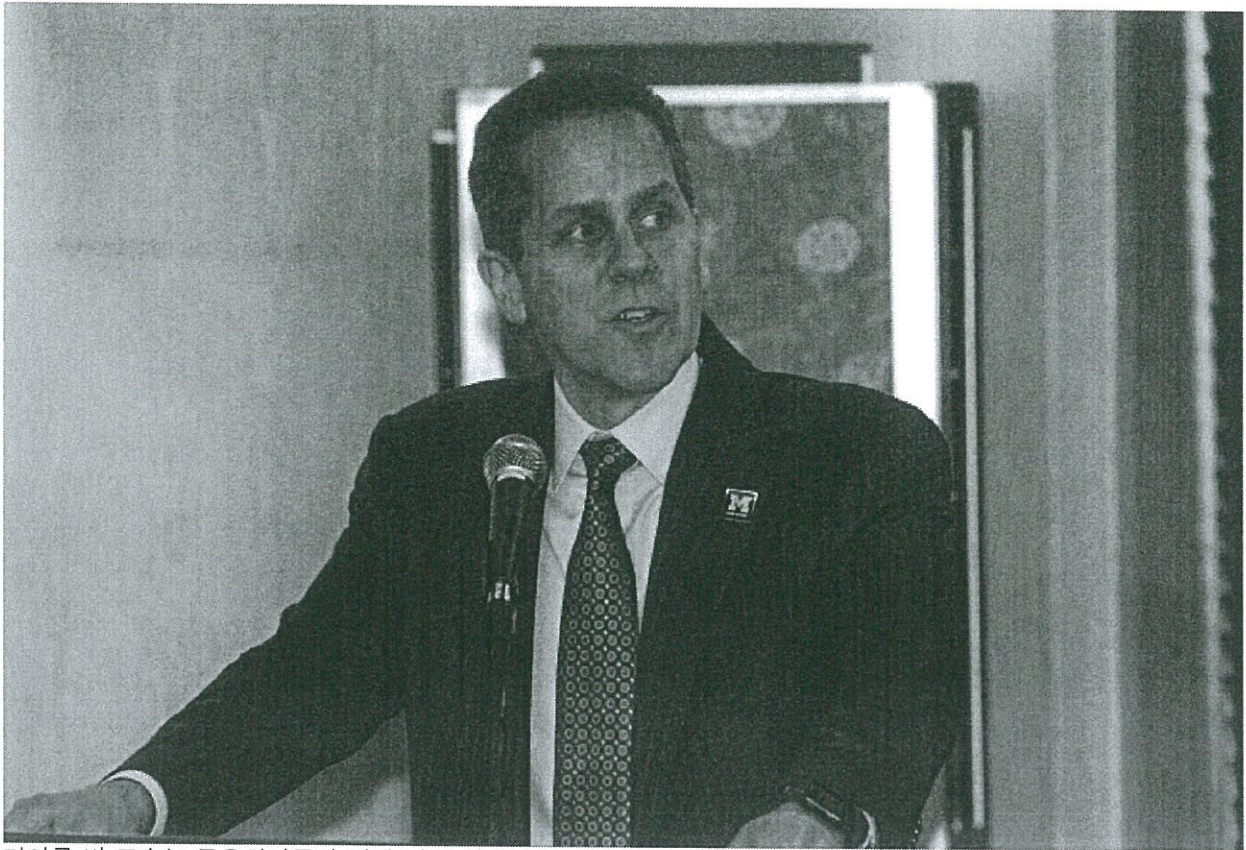
초청자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혁신은 장려되어야 하겠지만, 소비자 보호라든가 시장 안정성 훼손 같은 부작용에 대해선 철저히 사전에 대비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사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혁신’과 ‘적정한 금융규제 시스템’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바 교수도 “혁신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혁신의 수혜를 고루 받도록 하는 것은 서로 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렇기에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을 좀 더 개방해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즈음에서 바 교수는 금융 혁신에 대한 맹신은 소비자뿐 아니라 규제 당국도 간과해선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이 금융혁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혁신 정책을 장려한다 해놓고 실상은 전통적인 기술들에만 지원이 국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탁상 행정’으로는 금융 산업의 혁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규제당국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에 대한 맹신이 어느 나라보다 심한 우리 현실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과도한 유동성과 과다 부채 문제로 해법을 못 찾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로선 꼭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마이클 바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과거 리먼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을 쉽게 잃어버린 듯 하다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 ◆ 마이클 바 교수는 누구?

금융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가진 학자 겸 관료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습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금융규제안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산파 역할을 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다. 미국 금융시장 개혁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는 미시건대학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의 수장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길준·노연경 기자 alfie@viva100.com

# 'Level playing field' needed for fintech firms

*Ex-US official stresses importance of fostering int'l competition*

By Kim So-eun  
kskim@koreatimes.co.kr

Regulators should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for fintech companies to promote the growth of innovative industries, according to a professor of public policy and former U.S. government official.

"It is important for regulators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fintech players to get into the market," Michael Barr, dean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s Ford School of Public Policy,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in Seoul, May 13.

"Sometimes non-bank players are kept out of the banking system because the banks don't want them to compete," he noted, after delivering a speech at a forum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t the Korea Press Center.

This appears to be what has happened and continues to happen in Korea where internet banks, launched only a few years ago, face regulatory hurdles in expanding their businesses. Currently there are only two internet banks here.

The professor said regulations should only exis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financial health of companies.

"The government should remove impediments to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there is no strong safe and sound reason for having them," said Barr, who also previously served as assistant secretary for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U.S. Treasury Department, from 2009 to 2010.

While the U.S. has a buzzing fintech industry, the former official noted the government faces tasks in fixing the regulatory system.

"The U.S. still has a long way to go in putting in place the regulatory structure that would support fintech innovation," he said.

"One clear example is in the payments system, where our antiquated rules and technology leave the U.S. with an inefficient, costly payment system that also does not support the goals of financial inclusion. We are in urgent need of reform."



Michael Barr, dean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s Ford School of Public Policy, delivers a speech during a forum hosted by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t the Korea Press Center in Seoul, May 13.

Barr noted in his presentation at the forum held prior to the interview that the U.S. payment system is outdated because it is dominated by banks and credit card networks.

He added U.S. rules on data ownership make it hard for fintech players to come into the banking sector, as it is hard for consumers to switch their bank accounts.

### Balance between innovation, consumer protection

Meanwhile, the former official stressed the importance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fostering innovation and protecting consumers and companies. Barr places an equal emphasis on the latter, as he was a key architect behind the Dodd-Frank Act, which was an overhaul of U.S. regula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You don't want to be in a situation where Korea creates a set of rules that attract activity but result in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he said.

"It's about whether you have good safety and soundness rules, consistent consumer and investor protection and look for areas in regulation that are locking in old standards and aren't serving those kinds of purposes."

In the meantime, Korea also needs

**"The government should remove impediments to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there is no strong safe and sound reason for having them."**

to work on enhancing its competitiveness as a financial hub. In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published in March, Seoul ranked 36th.

"The government should be sure that domestic market is open to competi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sters innovation," Barr said.

"International competition brings outside firms at the cutting edge to participate in the local domestic market that can serve as a base for outward bound financial activities as well."

The U.S. has a vibrant market in which foreign financial firms play a very large role: nearly 25 percent of U.S. financial assets are held by foreign firms, the professor sai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thinking about ways that the Korean market can increase its connectivity with other markets to the extent that Korean-based firms whe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and global financial economy," he said.

"Some key attributes of the U.S. system include a strong focus on the national treatment of foreign firms, clear rules of the road, and robust safety and soundness and consumer protection standards that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for competition."

Unequal treatment is a point foreign players in the finance industry here have continually raised as a factor making Korea an unattractive finance hub.

# Banks to invest \$50 mil. in digital cash system

NEW YORK (Reuters) — Several of the world's largest banks ar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around \$50 million to create a digital cash system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o settle financial transactions,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plans.

The previously disclosed project, known as the "utility settlement coin," was first proposed by Swiss bank UBS Group AG and London-based technology

emerged as the software underpinning the cryptocurrency bitcoin, is a shared ledger of transactions maintained by a network of computers.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invested millions of dollars to test new blockchain systems aimed at reducing the costs and complexity of cumbersome processes. These include securities settlement and international payments.

Few projects have been deployed at scale so far.

The utility settlement coin, one of the most ambitious of such projects, would consist of a digital cash instrument that banks could use to settle transactions.

The coin would be a digital cash equivalent of central bank-backed currencies like the dollar or euro that would run on blockchain-based technology.

It would be convertible at parity and backed by cash assets held at a central bank. Spending the digital coin would be the same as spending the fiat currency it is paired with.

The group of banks has previously said it had been in discussion with central banks and regulators to ensure the project's structure was compliant.

Other initiatives on Wall Street are attempting to test a digital coin representing fiat currency that would run on blockchain-based technology. JPMorgan Chase & Co announced in February that it had created JPM Coin, a token to enable instant transfers of payments between institutional accounts.



The logo on the headquarters of the Union Bank of Switzerland (UBS) is seen in this file photo.

AP-Getty

## CLASSIFIED ADVERTISING

**Native English Teacher Wanted**

- How to Apply -  
keyman@keymedia.co.kr



Key Publications

**RENT**  
Daelim Apt  
Etaewon-dong

Size: 103 m<sup>2</sup> (31pyong)

Room3 bath2  
Full furnished

monthly Rent  
2.2million won

Size: 74 m<sup>2</sup> (22pyong)

Room3 bath1  
monthly Rent  
1.7million won

HP:010-7330-2898

**International Clinic**  
Family medicine and psychiatry

- A leader and innovator in international healthcare serving expatriate community and travelers for over 30 years.
- Convenient location in Itaewon.
- Same day consultation possible.

TEL: 02-790-0857 ~ 9

EMAIL: ksyclinic1@gmail.com

WEBSITE: www.internationalclinic.co.kr

**Korea Times Weekly**

프리미엄서비스회원리,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www.koreatimes.co.kr/weekly.htm  
m.koreatimes.co.kr/weekly.htm

주 소 주 오 프리미엄서비스 회원리,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물에서 다양한 영어 교육 콘텐츠 제공  
■ Hearing & Writing test: 향상된 학습 효과를 위한 무료 평가 교육

**Brand NEW**  
GenuineApt. for Rent

Samsung Raemian Apt, Gaepo Gangnam-gu, Seoul, Surrounded by Daemo-san(Mt.) & Yangjae-chun(Greek).

Ready for move in

904Sqft  
10th Fl(Garden View)

Large LR & 3 Bed(with Walk in Closet) / 2 Full Bath

635Sqft  
16th Fl(mountain View)

Large LR & 3 Bed / 2 Full Bath

Parking, Gym, Indoor Swim Pool, Guest House, Indoor Golf, Kids R, Book Cafe, Breakfast / Lunch Offered by Shilla Hotel, Ceiling Air con, Beautiful Gardens

Open for discussion with Owner: Key Deposit & Monthly Rent / Contract period / Maintenance / Fully Equipped / High Speed Internet

Contact : Sang/Owner (+82) 010-9885-9331  
(Kindly invite you to see first at anytime)

**Welcome to Jyoti Indian Restaurant**

Authentic Indian cuisine & 25+ yrs experience in Indian diets

Free WiFi & parking, Home delivery, Reasonable prices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5-2018 by TripAdvisor

Food Types: Snacks, Indian, vegetarian, vegan, healthy, keto, etc.

Jongro /Jongak	Chungmuro	Sincheon
515 & Jongro 12 ga, Jongro-gu, T. 02-770-7206	21, 12-4, Suseong-ro, Jung-gu, Seoul T. 02-2261-2812	36-6, Sincheon-ro, Yongsu-gu, Seoul T. 02-703-3535

Solving line 1, Jongro station, exit 12, first right turn, 서울로 704	Solving line 3 & 4, Chungmuro station, exit 12, straight 150m, behind SK gas station, first left	Solving line 2, Sincheon station, exit 5, first right turn
--	--	--

INFORMATION Email: jyoti@jyotiindian.com  
Tel: 02-770-2827-3

**Classified Ads**

Size	per Month	13 Days
100x100(mm)	KW 300,000	₩700,000
100x150 mm	KW 500,000	₩900,000
100x200 mm	KW 700,000	₩1,000,000
100x300 mm	KW 900,000	₩1,500,000

# MMT는 공짜 점심...돈 마구 찍다 재정위기 겪은 나라 많아

[중앙선데이] 입력 2019.06.01 00:40 수정 2019.06.01 01:28

## '적극적 재정 확대' 주장, MMT는 맞나



마이클 바 교수

"MMT는 공짜 점심이다." 마이클 바 전 미국 재무차관보의 말이다. 중앙SUNDAY와의 인터뷰 자리에서다. 최근 그는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서울을 찾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재무차관보로 금융개혁을 주도했다.

이래서 틀렸다-마이클 바 전 미 차관보  
 '화폐 발행, 파산 안 해' 가정 틀려  
 정통 이론 아니고 검증도 안 돼

MMT 지지자들 목소리 제각각  
 통화량 늘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 요즘 미국에서 현대화폐이론(MMT)이 실제 뜨거운 논쟁거리인가.

“민주당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뉴욕시) 등이 앞장서 MMT를 주장하고 있다. 코르테즈 의원은 진보적인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활동했다. 샌더스도 MMT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MMT 논쟁이 이코노미스트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 MMT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로 알고 있다. 왜 요즘 쟁점이 되고 있을까.

“기존 경제이론과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MMT는 정통이론이 아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정부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이어져도 파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많다.”

## 유명한 억만장자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이 MMT가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물론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는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 케인스학파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워런 버핏, 폴 크루그먼 등도 MMT 반대



역만장자의 눈에 비친 MMT

### MMT가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킬까.

“재정적자가 늘어나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사줘야 한다.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국채를 무한정 사들일 순 없다. 결국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 MMT 이론가들은 초인플레이션은 심한 정치적 불안 등이 야기한다고 말했다.

“남미 국가들이 MMT 주장대로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몇몇 나라는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를 고정 환율로 묶은 뒤에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 MMT이론가들은 기존 경제이론과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나라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쳤다.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양적완화(QE)란 새로운 정책도 실시했다. 처음에는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듯했다. 사실 통화량을

늘렸는데도 물가가 디플레이션 증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잖다.”

###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무부 경험에 비춰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해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시중은행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MMT가 제대로 된 처방이 될지 의문이다. 특히 MMT가 분명치 않다.”

### **감춰진 비용, 다음 세대가 치를 수도**

#### **MMT가 분명치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MMT 지지자들은 각자 다른 논리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어떤 학파의 이론이 완벽하게 통일되기는 힘들지만, MMT는 학자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

#### **예를 든다면.**

“어떤 학자는 재정지출보다 시중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기보다 시중은행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받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벌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MMT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책 대안의 성격도 뚜렷하지 않다.”

#### **일자리 보장제는 기본소득과 비슷하다.**

“일자리 보장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MMT 지지자들은 일자리 보장 등으로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론가들과는 달리 정책 담당자들은 비용과 효과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런데도 MMT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공짜 점심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당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따른다. 감춰진 비용도 있게 마련이다. 얼마 뒤에 또는 다음 세대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된다. 나는 MMT 팬이 아니다.”

강남규 기자

**마이클 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재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09년 이후엔 재무부 차관보로 월가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 상당히 적극적인 인물로 꼽힌다. 현재 미시간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이다.

관련기사

**나라 빚 늘면 어때서? 국내도 논쟁 불붙었다**

**MMT는 '돈 풀기' 아냐...한국, 공공투자 늘려 가계빚 줄여야**

**금융위기 계기로, 케인스 제자끼리 붙은 MMT 논쟁**

##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의 경고

☞ 한계희기자 | Ⓞ 승인 2019.06.03 10:02

| “금융기관 투명성 더 높여야 한다”



“금융당국의 정책에서 금융 혁신과 건전성 규제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때다.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금융 혁신을 도모하되 위기에 대한 완충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의 경고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을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됐으나 현재는 약화된 상태다.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바 원장은 금융 위기의 경우 무분별한 리스크 관리와 전 세계 자본시장의 모순이 누적돼 일어나는 만큼 세계 각국이 공조해 국제 금융시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활성화하면서도 충분한 감시와 견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리스크 간과 땀 금융시장 붕괴”

이날 바 교수는 발전하는 금융 산업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으로 ▲금융기관의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상실증 ▲레버리지 과잉 ▲거품 ▲글로벌 리스크 ▲혁신에 대한 과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금융 혁신의 양면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예컨대 금융시장에 혁신이 일어나면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고빈도 매매(HFT)를 들었다. 금융이 IT기술을 접목해 고빈도 매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HFT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상황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이 정교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 산업을 더 개방해 경쟁도는 높이되 완충 여력도 확보해놔야 한다. 공개된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바 원장은 강연에서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혁신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금융당국이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결제시스템은 매우 구태의연하며 혁신은 커녕 기존 전통 기업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형 은행 외에는 스트레스테스트 낮추고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7000억 달러 기업에는 이런 규제를 아예 완화시켰다. 미국 금융 산업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바 원장은 금융혁신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여러 가지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 스스로도 혁신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 원장은 이 같은 현상은 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 당국이 조심스러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면서 규제 당국이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당국이 장려하는 정책이 전통적인 기술들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미국 경제는 도드프랭크법 통과 이후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 평가를 받을 정도로 거의 유일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는 금융 규제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 간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위험 요인으

로 지목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 원장은 "금융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며 "혁신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과 혁신의 수혜를 고루 받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융 혁신 상황에서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일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회복력과 복원력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균형이 중요한데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을 좀 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로필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은 미국 진보진영의 '금융규제' 찬성론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근간을 마련한 주역이기도 하다.

실제 그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한 도드프랭크법의 발의와 통과(2010년)에 큰 역할을 한 금융 석학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 특별보좌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재무부 금융기관담당 차관보 등 공직도 두루 거쳤다.

"

저작권자 © 리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계희기자